



주간통일정세 2013-20(2013.05.13 ~ 05.1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3-2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부부,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 공연 관람(5/13,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화 봉화에 술극장에서 열린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함.
 - 이번 공연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경희·김기남 노동당 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과 최근 '수령 결사옹위의 모범'으로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은 평양시 인민보안부 교통지휘대의 지구대원 리경심 등이 참석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연 관람 뒤 "총대와 법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목숨 바쳐 보위하려는 인민보안원들과 내무군 장병들의 신념이 그대로 함축된 공연"이라며 치하함.

- **北 김정은, 새로 건설된 기계공장 시찰(5/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장 주변환경을 보고 "조형화, 예술화, 공원화된 멋쟁이공장"이라고 치하했으며 생산조립장, 기계가공장, 정보실, 설계실, 기술공정실 등을 둘러본 뒤에는 "이 기계공장은 우리나라 기계공업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면서 생산이 시작되면 그 효과를 단단히 볼 것이라고 말함.
 - 김 제1위원장의 기계공장 시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동행함.

- **北,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전창복으로 교체(5/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대의 식료품가공공장인 '2월20일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하면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전창복이 동행했다"고 소개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현철해에서 전창복으로 교체됐음을 밝힘.
 - 차수인 현철해 전 제1부부장은 노동당에서 정치국 위원, 중앙위 위원, 중앙군사위 위원 등을 맡은 군부의 핵심 인물로,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의 군사 교육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짐.

- **北 김정은, 軍 식료품공장 시찰(5/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2월20일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장에서 새로 건설된 종합가공직장과 규모가 커진 즉석쌀밥직장, 맛내기직장 등의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생산 수준을 끌어올리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장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설비들을 현대화하며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고 노력을 절약하면서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다"고 말함.

● 北 김정은, 룡문 술공장 현지지도(5/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8일 룡문 술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물 여과 공정과 술 생산·포장 공정, 저장고, 제품 진열실 등을 둘러보고 "해당 제품의 질에 대해 보증하고 선전에 이용되는 상표도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표를 잘 만들 것을 지시함.
- 이어 "현대적인 술공장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설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아버지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근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고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전창복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그리고 박정천 상장, 서흥찬 중장 등이 수행함.

● 북한 박봉주 총리, 잇단 경제현장 방문 행보(5/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박 총리가 황해북도 송림시에 있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고 보도함.
- 박 총리는 이 기업소에서 협의회를 열고 철강재의 생산 증대 문제를 토의했으며, 내각 등 관련 기관에서 기업소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대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정은동향

- 5/14,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대 원호사업 기여자들에 '감사' 전달(5.14, 중방)
 - 봉화비누공장·옥류결혼식 식당 일꾼과 종업원, 관문2동 축산작업반장 이영희 등
- 5/17,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軍 2월20일 공장' 현지지도(5.17, 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전창복(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동행
 - 공장 설비들을 현대화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무인화를 실현하는 것이 생산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음.
- 5/19, 김정은 黨 제1비서, 룡문술공장 현지지도(5.19, 중통·중·평방)
 - 최룡해, 전창복, 박정천, 서흥찬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및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현지요해(5.16,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요해(5.19, 중통·중방)

나. 군사

- **北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증가, 최대 200대 추정(5/17, 연합뉴스)**
 -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TEL)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문건에 공개됐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함.
 - 미국 의회에 지난 2일 제출된 A4용지 20매 분량의 '북한 군사력 증강 보고서'를한국국방연구원(KIDA)이 17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최대 200대가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 **北, 단거리 미사일 3발 동해로 발사...軍, 경계강화(종합3보)(5/18, 연합뉴스)**
 - 북한이 18일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유도탄 3발을 동해 북동쪽으로 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방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2회, 오후 1회 등 3차례에 걸쳐 동해안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유도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발사체가 무수단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은 아닌 단거리 발사체인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고 전함.
- **北, 단거리 발사체 이틀연속 발사...신형방사포 가능성(종합2보)(5/19, 연합뉴스)**
 - 북한이 18~19일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전함.
 - 군의 한 관계자는 19일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에도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해 동해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다. 경제

- **北 총리, 남흥화학 방문... 비료생산 독려(5/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찾아 비료 증산을 독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함.
 - 박 총리는 기업소 간부와 노동자들에게 "농업전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주 타격 방향이고 비료는 곧 쌀"이라며 "비료생산을 늘려 올해 알곡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비료생산량을 늘리려면 공장에 석탄을 잘 보장해줘야 한다며 석



탄 수송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함.

● **北 국가가격제정위→국가가격위 개칭(연합뉴스; 평양방송)**

- 북한이 국정가격을 정하는 기구인 국가가격제정위원회를 국가가격위원회로 개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함.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17일 각 기관 및 단체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지원 소식을 전하며 "국가가격위원회, 국가관광총국의 일꾼들과 정무원들이 후방물자, 생활필수품 등을 마련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경제)**

- 제16차 '평양봄철국제상품 전람회', 5.13 강석주(내각부총리)·리룡남(무역상)·박응식(국제전람회 사장/개막연설)·오룡철(무역성 부상/축하연설) 등 참가下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5.13,중통·평방)

라. 사회·문화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北, 자체 생산 치료제 소개(5/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원장, 조선부강제약회사 사장과의 대담 형식의 기사를 통해 "신형 조류독감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금당-2' 주사약을 소개함.
- 통신은 신형 AI 환자들은 모두 면역기능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면서 몸을 단련하고 면역을 높이는 데 필요한 약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北, 도시미화법 제정... '사회주의 문명국' 박차(5/15, 연합뉴스; 민주조선)**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5월 9일지는 '법규 해설' 코너에서 도시미화법을 소개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함.
- 민주조선에 따르면 도시미화법은 5장 42조로 구성됐으며, 법의 목적은 "도시의 구획정리, 건물과 시설물의 미화, 도시청소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는 데 이바지하는 것"임.

● **北,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조(5/17, 조선중앙TV)**

- 북한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의 박명수 원장은 17일 조선중앙TV에 출연, H7N9형과 H5N1형 AI의 인체 감염으로 인한 중국의 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제반 사실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함.



- **北 AI 방역 총력...비상방역위원회 구성(5/18,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지난달 중앙과 각 도, 시, 군 단위에서 비상방역위원회가 구성돼 각급 단위별로 위생교육과 검진 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함.
 - 보건성도 효과적인 위생교육을 위해 AI 예방을 위한 '해설담화 제강'(기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적은 글)을 만들어 전국 각지에 내려 보냄.

- **北 평양서 외국인 자선마라톤대회 열려(5/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고아 돕기를 위한 외국인의 자선 마라톤대회가 이달 초 평양에서 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약 50명은 이달 1일 평양에서 열린 자선 마라톤대회에 참가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중국, 최근 북한에 비료 20만t 무상 지원(5/14,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량의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데 이어 조만간 식량 원조도 재개할 방침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방송은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지난 달 말께 북한에 20만t 이상으로 추산되는 비료를 제공해 집단 농장들에 배급하도록 했다고 전함.

- **FAO 북한사무소 대표 "북한 기근 사실무근"(5/14, 이타르타스통신)**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북한 사무소 대표인 벨라이 데르자 가가가 14일(현지시간) 북한 기근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함.
 - 그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전역에서 직황을 관찰 중인 유엔식량농업기구 직원들은 기근의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면서 "(현재까지) 기근은 없다"고 설명함.

- **아베의 도박?...일본 정부 인사 전격 방북(5/14, 연합뉴스; 교도통신)**
 - 2002년과 2004년 1, 2차 북한·일본 정상회담에 관여한 이치마 이사오(飯島勳·67)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자문역) 14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치마 참여는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 김철호 북한 외무성 아시아국 일본 담당 부국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北 노동신문, 日에 과거청산 거듭 촉구(5/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일본의 최악의 역사는 덮어버릴 수 없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글에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인민이 당한 정신적, 인적, 물질적 피해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최대최악의 것이었다"라며 일본은 "국가적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했었다"고 강조함.
 - 신문은 "그러나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죄행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입장과 태도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며 "여기에 바로 일본 특유의 파렴치성과 교활성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함.
 - 또한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는 "반인륜적 죄악을 청산하기 위한 정치적, 국제법적 문제"라며 "죄악에 찬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새 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역설함.

- **OIE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北에 전문가 파견 준비"(5/15, 미국의 소리(VOA))**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한 북한에 대한 실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함.
 - 베르나르 발라 OIE 사무총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과 접촉 중이며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수일 안으로 현지에 전문가들을 보낼 것이라고 밝힘.

- **中 여행사 "외국인 北 신의주 관광 곧 개시"(5/15,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여행사는 조만간 외국인의 신의주 관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 "케네스 배, 특별교화소서 교화생활 시작"(5/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국 공민 배준호가 5월 14일부터 특별교화소에 입소돼 교화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함.
 - 통신은 배 씨가 지난달 4월 30일에 열린 재판에서 반공화국 적대범죄 혐의로 북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따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힘.

- **北 김영일 당 국제비서, 日정부 인사 면담(5/15, 조선중앙방송; 교도통신)**
 - 북한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가 방북 중인 일본의 이치마 이사오(飯島勳·67) 특명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자문역)를 면담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함.
 - 당 국제부장을 겸임하는 김 비서는 북한의 대 일본 외교 핵심 당국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일우호친선협회 고문도 맡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함.



-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이지마 참여가 17일까지 북한에 체류하며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협상 담당 대사 등 북한 외무성 간부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협의 진전 상황에 따라 체류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힘.
- **美민간단체, 우물파기 사업 위해 다음달 방북(5/16,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대북지원단체 '웰스프링'의 제임스 린튼 대표는 다음달 말 방북해 북한 지하수개발 관계자들과 우물파기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방송은 린튼 대표가 2007년부터 매년 평균 2차례 북한을 방문해 우물파기 사업을 진행했으며 황해북도 연탄군 도치리를 비롯한 6개 마을에 우물을 만들었다고 전함.
- **중국 창바이~북한 혜산 국경교량 보강 착수(5/16, 길림신문)**
 - 중국이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과 북한 양강도 혜산시를 잇는 국경교량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 공사에 나섰다길림신문이 16일 보도함.
 - 중국은 북한과의 교역량 증가로 창바이통상구와 교량을 통한 화물차 통행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450만위안(약 8억1천만원)을 들여 교각과 상판 등을 보강하고 도로포장을 새로 하기로 함.
- **북한 제작 '아프리카 에펠탑?' 천덕꾸러기로 전락(5/1, 글로브앤드메일)**
 - 세네갈에서 아프리카의 에펠탑을 꿈꾸며 등장한 '북한표' 조형물이 현지 정권교체와 함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고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지난해 물러난 압둘라예 와데(86)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세워진 이 기념상은 당시에도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동상 개막 행사를 앞두고 와데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음.
- **訪北 사흘째 日내각 인사 일행, 평양시내 관광(5/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飯島勳·67)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자문역)가 평양시내 여러 곳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함.
 - 중앙통신은 "일본 아베 내각 위기관리 특별담당 참여 이지마 이사오 일행이 평양민속공원을 참관했다"라며 "그들은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공원의 여러 곳을 돌아봤다"고 밝힘.
- **北 '2인자' 김영남, 日총리 자문역 면담(종합)(5/16, 조선중앙TV)**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6일 방북 중인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飯島勳·67)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총리 자문역)를 면담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TV는 "김영남 동지는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일본 아베 내각 위기관리 특별 참여 이지마 이사오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전함.
- **방북 日총리자문역 귀환…"장시간 진지한 협의"(종합)(5/17, 교도통신)**
 - 교도통신이 17일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飯島勳·67)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총리 자문역)가 3박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이날 베이징(北京) 국제공항을 통해 귀환한 이지마 참여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진지하게, 장시간 회담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그는 그러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밝히지는 않음.
 - 이지마 참여는 지난 14일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에 도착해 16일 북한의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했고 이 자리에는 북일 대화의 실무 책임자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협상 담당 대사가 배석함.
- **北, 美 ICBM 발사시험 비난…"군사적 도전"(5/18, 노동신문)**
 - 북한은 18일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발사 시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비난함.
 - 신문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한반도 정세 완화를 이유로 내세우며 오는 21일 ICBM 발사 시험을 공언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대한 희롱이며 모독이 아닐 수 없고 특히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도전"이라고 밝힘.
- **北, 외교부 日이지마 방북 비판 브리핑 비난(5/18,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특명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자문역)의 방북이 한·미·일 3국의 대북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외교부 논평에 대해 '추태', '망동' 등의 표현으로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주제넘는 참견질, 추악한 본색이 발로'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국가간에 일정한 계층의 정치인들이 오고가는 것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라며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 **중국 어선, 무장한 북한인들에 나포…中당국 조사(5/19, 연합뉴스)**
 - 중국 어선이 북한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인들에게 나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중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전함.
 -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북한 서쪽 해안에서 약 70km 떨어진 해상을 지나던 한 중국 어선이 무장한 신원불상의 북한인들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고 이 어선의 선장인 위쉐쥘이 주장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 논평, 미국무성 대변인 발언(北의 국제적 의무이행, 의무준수 진지함 등)에 대해 '국제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설'이라고 비난하고, 現 한반도 사태는 '美의 對北적대시정책에 있다'고 책임 전가 (5.13, 중통)
 - 美 합참의장 발언(韓美日 통합미사일방위체계 구축 등)에 대해 "군사적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흥심의 발로"며 '아시아태평양 지배 실현을 위한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라고 비난(5.13, 중통·평방)
 - 일본 '아베' 내각 위기관리 특별 담당 참여 '이지마 이사오' 일행, 5.14 평양 도착 간략 보도(5.14, 중방·중통)

나. 6자회담(북핵)

- 美 고위관리 "北 핵무기 소형화 기술 개발 못 해"(5/15, 연합뉴스)
 - 미국 고위관리가 "북한이 아직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외신과의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 표적을 향해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核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민족적 금지이고 자랑'이라며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만년재부'라고 지속 강조 (5.13, 중통)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노동신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핵개발 책동"(5/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최근 진행된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핵무기 개발 책동"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핵무장 야망에 비긴 원자력 협정 개정 놀음'이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핵무장 야망'을 실현하고 '북침' 기도를 손쉽게 이루려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비밀리에 핵물질 추출부터 핵탄두 및 핵무기 운반 수단 제작 기술에 이르기까지 핵무장에 필요한 것들을 구



축했다고 주장하고,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단기간에 '북침' 핵공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밝힘.

● **北매체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겨레에 대한 모독"(5/13,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내놓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제안에 대해 '모독', '궤변' 등의 표현으로 비난함.
- 매체는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세계평화공원 구상이 "민족 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안고 사는 온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주장함.

● **北, 美항모 니미츠호 참여 한미훈련 맹비난(5/13,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도발은 누가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니미츠호의 해상훈련 등을 언급하고 "조선반도(한반도) 긴장격화의 주범, 핵전쟁 도발의 장본인들이 아직도 우리의 도발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함.
- 노동신문도 이날 '긴장격화의 새로운 불씨'라는 논평에서 니미츠호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 내외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모험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만일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감히 불질을 해댄다면 그 후과(결과)는 실로 비참할 것"이라고 경고함.

● **北신문 "한반도 정세 조금도 완화되지 않아"(5/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남한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낮아졌다고 보는 시각을 반박함.
- 신문은 '조선반도(한반도) 핵위기 사태가 주는 심각한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이어 지난 11일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한미합동훈련을 언급하고 "조선반도 정세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北매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허황한 망상" 비난(5/15,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망상이라고 밝힘.
- 논설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미국의 세계제패 야망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어떤 실현 가능성도 없는 허황한 망상일 뿐"이라며 이 구상에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다고 주장함.

● **北, '신평프로세스' 본격 비난... "동족대결정책 복서판"(5/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대결과 신뢰는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신평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다를 바 없다



며 "실패한 과거의 대결정책 복사판을 그대로 들고나온 것은 변함없는 동족압살야망의 발로"라고 주장함.

- 통신은 박 대통령이 이달 초 방미 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은 앞으로 있을 수 없으며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신뢰프로세스)이 동족대결 각본임을 논박할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함.

● **北 "5월에도 한반도에 폭발위험 첨예한 국면 조성"(5/16, 노동신문)**

- 북한은 이달 초순 동해 상에서 실시된 한미 해상훈련과 서해 대잠수함 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에 "5월에도 폭발위험을 안은 첨예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함.
- 신문은 '무모한 핵공갈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군사논평원의 글에서 "미국이 하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대한 무력을 훈련이라는 명분 밑에 조선반도 수역에 집결시킨 것은 우리의 핵군사력에 대한 희롱"이라며 이같이 밝힘.

● **北, 5·18 '영웅적 봉기' 평가...반미투쟁 선동(5/18, 노동신문)**

- 북한은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일인 18일 5·18을 '영웅적 무장 봉기'로 평가하고 '친미보수세력'에 대한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밝힘.
- 신문은 이날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를 위한 영웅적 항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5·18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한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적 대중항쟁"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회담 제의 비난... "南정권 상대해야 할지 검토중"(5/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박근혜정부와 상대해야 하는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측의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 상에서 실시된 한미 해상훈련을 거론하며 "현 정권을 상대해야 하겠는지, 상대해야 해결될 것이 있겠는지를 우리는 지금 심중히 검토중에 있다"고 말함.
- 대변인은 "남측이 진정으로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정상화할 의향이 있다면 근본문제를 푸는 데로 나서야 한다"며 "우리에 대한 도발적인 망발과 대결망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개성공업지구 전망과 금후 북남관계 향방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기타 (대남)

-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총대변인 담화(5.13), 새누리당의 법률 제정안(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발의에 대해 “反민족적·反통일적·反인권적 범죄”라며 ‘反새누리당 투쟁’ 지속 선동(5.13, 중통·중방)
-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등 訪美 국정수행에 대해 “추악한 사대매국적 체질, 외세의존적 자세를 만천하에 드러낸 치욕행각, 구걸행각”이라고 지속 폄하 비난(5.14, 평방·노동신문)
- 국군 8군단의 대침투종합훈련 예정, 연합뉴스 인용 비난(5.14, 중통·중방)
- 영화 ‘천안함프로젝트’ 상영을 가로막는 것은 ‘비핵, 개방, 3,000의 포장만 바꾼 대결정책 복사판’이라고 왜곡하며, ‘모략적 진상이 파헤쳐지는데 불안을 느낀 자들의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5.15, 중통)
- ‘韓美 연합군사훈련’ 관련 ‘미국은 핵타격 수단의 수적우세를 내세워 對北침략전략을 실현하고 우리(北)의 자주권·생존권·발전권을 침해말살하려는 것’이 ‘훈련목적’이라고 주장(5.19, 중통·평방·노동신문/합동군사연습의 범죄적 목적은 감출 수 없다)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데이비스 "中, 北에 비핵화 압박할 수 있는 위치">(5/14, 연합뉴스)
 -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4일 "중국은 북한의 선택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북한에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는 것의 중요성을 압박할(press upon)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밝혔다.
 - 한·중·일 순방차 서울을 찾은 데이비스 대표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매우 강한 전통적이고 경제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할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따르는데 관심이 없다고 한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것"이라면서 "중국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고 나는 중국측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그의 이런 발언은 미·중간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더욱 강한 압박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 한미 양국은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런 평가를 공유하고 중국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북한 태도변화 유도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15~16일 중국을 방문하는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우리측과의 협의를 토대로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추가적인 대북 압박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됨.
 - 그는 애초 예상과 달리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더이상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상받아야 하는 무엇처럼 다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우리의 목적은 북한이 그들의 (비핵화) 의무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미국은 북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한국, 일본 및 동맹, 5자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 또 개성공단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대화 추구가 비핵화 사전조치와는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은 특별한 사례로 그것은 양립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이 잠정 폐쇄라고 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북한과 대화하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했음.
- 데이비스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김남식 통일부 차관과 만나 남북 현안에 대해 논의. 김 차관은 최근 남북관계 현황 및 북한정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고 데이비스 대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감을 표시했음.

● <北 핵실험 한반도 넘어 세계안보 저해>〈IAEA 총장〉(5/18, 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안보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7일(현지 시간) 밝혔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아마노 총장은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지역뿐 아니라 국제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아마노 총장은 러시아와 미국, 한국, 일본 등이 한반도를 비핵 지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평가했음.
- 한편, 아마노는 IAEA가 한반도 위기 해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어떤 경우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미·북 관계

● <北노동신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핵개발 책동">(5/13, 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최근 진행된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핵무기 개발 책동"이라고 비난했음.
- 노동신문은 이날 '핵무장 야망에 비긴 원자력 협정 개정 놀음'이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핵무장 야망'을 실현하고 '북침' 기도를 손쉽게 이루려 한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비밀리에 핵물질 추출부터 핵탄두 및 핵무기 운반 수단 제작 기술에 이르기까지 핵무장에 필요한 것들을 구축했다고 주장하고,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단기간에 '북침' 핵공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음.
- 이어 한국 내에 있는 1만t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60t 이상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며 원자력 협정 개정 '놀음'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발발 위험을 극도로 고조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 양국은 지난달 기존의 원자력 협정 만료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는 대신 오는 6월부터 3개월마다 수석대표가 추가 협상을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음.
-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한미 공동 결정 방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농축에 대해서도 재처리와 마찬가지로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美 북한인권특사 19일 방한...北 인권·식량 협의>(5/15, 연합뉴스)

- 북한 인권 및 식량문제 등에 대한 협의자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9일께 한국을 방문
- 한 정부 소식통은 15일 "킹 특사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19일께 서울에 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킹 특사는 다음 주 중반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 탈북자, 북한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킹 특사는 21일에는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강연도 할 예정이다.
- 일각에서는 북한이 춘궁기에 있다는 점에서 킹 특사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간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옴.
- 그러나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직돼 있기 때문에 당장 인도적 지원이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 안팎의 전망. 북한의 식량사정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킹 특사는 또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 문제와 관련해 우리측과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4년 미국 북한인권법 성안을 주도했던 킹 특사는 2009년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됐음.
- 미국 내 탈북자 정착 및 북한인권법,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한국을 방문하고 있음.

● <北, 美 ICBM 발사시험 비난... "군사적 도전">(5/18, 연합뉴스)

- 북한은 18일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발사 시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한반도 정세 완화를 이유로 내세우며 오는 21일 ICBM 발사 시험을 공언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대한 희롱이며 모독이 아닐 수 없고 특히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도전"이라고 밝혔다.
- 신문은 미국의 ICBM 발사 시험은 "세계 임의의 나라들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침략행위의 전주곡"이라며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우리를 놀



래려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이어 신문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침략의 무리가 내 조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타격을 가해 침략의 본거지까지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
-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미니트맨Ⅲ 실험을 연기했으며, 당시 북한이 중거리미사일 무수단호 발사 움직임을 보이던 상황이어서 북한 달래기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음.

● <백악관 "북한, 위협·도발로 얻을 것 없다">(5/19,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유도탄 3발을 동해 북동쪽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음.
-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위협과 도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는 고립을 심화할 뿐"이라고 비판했음.
- 헤이든 대변인은 특히 "이런 도발과 위협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북한 지도부가 귀를 기울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유도탄 발사 소식 이후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한 뒤 "북한이 (도발) 자제하고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CNN방송, 폭스뉴스, ABC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북한의 유도탄 발사 소식을 비중있게 전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음.

다. 중·북 관계

● <"대북 금융거래 중단에 '중국의 분노' 반영">(5/14, 연합뉴스)

- 중국 대형은행들이 최근 북한과의 거래중단이라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고 나선데에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분노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음.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중국 은행들이 대북 관련 금융거래를 중단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유례없는 '재정적 레버리지'를 작동시킨 것이라고 평가했음.



- 특히,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현금거래를 제재할 것을 요구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에 비춰봐도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분노가 반영됐다"고 분석했음.
 - 이와 관련해 중국은행은 지난 7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계좌 폐쇄와 모든 금융 거래의 중단 사실을 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건설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 등 다른 주요은행도 대북 금융거래를 중단한 상태임.
 - 물론, 중국 대형은행들의 대북 금융거래 중단이 북한에 대한 완전한 금융제재를 뜻하는 것은 아님. 현재, 북중 국경지역에 있는 중소 규모의 중국 은행들은 여전히 북중 거래를 위한 대규모 송금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앞서 지난 14일 교도통신도 단둥에 있는 한 은행 관계자를 인용,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은행 역시 단둥지점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FT는 그럼에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북중 무역이 김정은 정권의 '현금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위협'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음. 금융거래의 완전한 단절은 양측의 교역 역시 파탄 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임.
 - 지안 차이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부소장은 "중국은행들이 이번처럼 통합적으로 평양에 행동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국 정부가 지시를 내린 것 같다"고 해석했음.
 - FT는 중국이 이처럼 북한에 대해 유례없는 금융제재를 가한 것은 양측의 외교적 갈등과 중국을 무시하는 김정은 체제의 태도에 분개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음.
 -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과 핵실험을 중단하라는 중국의 지속적인 요청을 거부해왔는데, 이 같은 외교적 불협화음들이 이번 금융제재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임.
- <中 여행사 "외국인 北 신의주 관광 곧 개시">(5/15, 연합뉴스)
- 중국인들의 북한 육로 관광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중국의 한 여행사가 외국인의 신의주 관광 길이 곧 열릴 것이라고 밝혔음.
 - 15일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여행사는 조만간 외국인의 신의주 관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신의주 관광상품의 가격과 일정도 곧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여행사는 "우리는 외국인의 신의주 관광 길을 열기 위해 다년간 노력해왔다"며 당국의 승인을 얻었음을 시사했음.
 -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의 한 가이드는 트위터를 통해 "다음 주말인 이달 25~26일 신의주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베이징청년여행사 등 중국 여행사들은 최근 북·중 접경 도시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를 경유해 북한에 들어가는 관광상품의 예약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음.
 - 중국인들의 북한 육로 관광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로 긴장이 고조되자 지난달 10일 전면 중단됐음. 중국인들의 북한 육로 관광이 재개된 데는 중국 당국의 지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됨.
- <“중국, 최근 북한에 비료 20만t 무상 지원”>(RFA)<(5/15, 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량의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데 이어 조만간 식량 원조도 재개할 방침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RFA는 북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지난 달 말께 북한에 20만t 이상으로 추산되는 비료를 제공해 집단 농장들에 배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금융제재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등 채찍과 당근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RFA는 논평했음.
 - 익명을 요구한 함경북도 농업국의 한 관계자는 "각 집단 농장에 배급된 비료 양으로 미뤄 중국 정부가 지원한 비료 규모가 20만 t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지원 시기도 예년보다 빠른 것이라고 말했음.
 - 양강도의 한 농부는 "작년에는 중국이 지원해준 비료를 6월10일께 배급 받았으나 올해는 4월26일부터 비료 원조가 시작됐다"고 밝혔음. 그는 작년에는 각 집단 농장에 대한 비료 배급량이 10t에 불과할 정도도 적었다고 덧붙였다.
 - 중국의 대북 비료 원조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국경을 맞댄 신의주를 통해 이뤄졌다고 RFA는 전했다.
 - 평안북도 무역국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무상 지원한 비료가 기차와 화물트럭에 실려 신의주 세관을 통과했다면서 각 도의 무역국들은 일정 비료를 비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음.
 - 이 관계자는 "중국이 조만간 식량 원조도 할 것이란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서 평양 당국은 중국으로부터 식량이 곧 도착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비축미를 인민들에게 배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음.
 - 북한 소식통들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고 있다는 한국의 보도를 접했다면서 북중 간 활발한 무역을 보면 이런 보도를 믿기 어렵다고 털어놨음.
 - 양강도의 한 농민은 "북중 간 무역이 매우 활발하다"면서 "양강도 삼지연 부근에 새 세관을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압록강을 통한 북중 간 밀무역도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한산 옥수수 2kg에 중국 비료 1kg를 물물교환하던 것이 중국 비료 원조가 시작되자 옥수수 1kg 대 비료 1kg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 일·북 관계

● <아베의 도박?...일본 정부 인사 전격 방북>(5/15, 연합뉴스)

- 2002년과 2004년 1, 2차 북한·일본 정상회담에 참여한 일본 정부 인사가 14일 북한을 방문했음. 북한을 찾은 인사는 이시마 이사오(飯島勳·67)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자문역)임.
- 이시마 참여는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 김철호 북한 외무성 아시아국 일본 담당 부국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참여는 총리의 상담역을 수행하는 비상근 공무원으로 현재 9명이 있음.
- 이시마 참여는 특정 분야를 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분야에 관여하는 '특명 담당 참여'여서 주로 북·일 관계와 관련한 물밑 접촉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시마 참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당시 약 5년간 총리 비서관을 담당한 인사로 2002년과 2004년에 평양에서 열린 1, 2차 북일 정상회담에 관여했음.
- 정부 관계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후루야 게이시(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과 이시마 씨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와의 조율을 거친 북한 방문임을 밝혔다고 교도는 전했다.
-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시마 참여가 이번 주말까지 평양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교도통신은 "이시마 참여의 방북 목적은 확실하지 않다"며 김철호 부국장이 공항에 나온 점으로 미뤄볼 때 이시마 참여가 정해진 북·일 관계를 타개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아베 정권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 간부와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교도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이시마 참여에 정부가 어떤 임무를 맡겼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음.
- 그러나 총리 관저 소식통은 "정권의 (사전) 이해를 얻었으며 중요한 인맥을 통해" 북한에 간 것이라고 소개한 뒤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목표까지 서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 일본 정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1월 월드컵축구 아시아 3차 예선 북·일전 당시 외무성 직원이 일본 응원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북한에 간 이후 약 1년6개월 만임.
-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8월 4년 만에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재개했다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중단했음.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공식 협상은 없었음.
- 한편, 교도통신은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3~16일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선 때에 맞춰 북한이 일본 인사를 받아들인 것은 한·미·중·일 4개국 사이의 대북 공조를 흔들려는 포석일 수 있다고 분석했음.



● <北 노동신문, 日에 과거청산 거둬 촉구>(5/15, 연합뉴스)

- 일본 정부 인사의 방북을 전격 수용한 북한이 15일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강력히 비난하며 과거청산을 거둬 촉구하고 나서 주목됨.
- 노동신문은 일본 정부 인사가 방북한 다음 날인 이날 '일본의 죄악의 역사는 덮여버릴 수 없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글에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인민이 당한 정신적, 인적, 물적 피해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최대최악의 것이었다"라며 일본은 "국가적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했었다"고 강조했다.
- 신문은 "그러나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죄행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입장과 태도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며 "여기에 바로 일본 특유의 파렴치성과 교활성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 신문은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는 "반인륜적 죄악을 청산하기 위한 정치도덕적, 국제법적 문제"라며 "죄악에 찬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새 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역설했음.
- 신문은 일본에 "이제라도 이성을 갖고 과거청산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일본의 양심과 성실성이 국제사회에서 검증될 때만이 정치난쟁이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촉구했음.
- 일본 정부 인사가 방북한 시점에 북한이 과거청산 문제를 다시금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일본과의 교섭을 앞두고 과거사에 대한 배상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임.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남북자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그동안 일본의 과거청산과 배상이 먼저 이뤄져야 납치문제 등 양국 현안이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마. 기 타

● <반기문 유엔총장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행위">(5/19,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명했음.
-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반 총장은 이날 모스크바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사를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이 하루 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당국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음.
- 앞서 북한은 18일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유도탄 3발을 동해 북동쪽으로 발사했음.
- 반 총장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아주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추가적 도발을 자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그들(북한)이 대화로 복귀하고 긴장을 낮출 때가 됐다"며 "유엔은 이 같은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반 총장은 이어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활성화를 위해 북한



- 과의 접촉 기회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하루 전 남부 도시 소치에서 이루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 반 총장은 뒤이어 시리아 분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리아 내전사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국제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그는 "관계국들이 유엔이 이 회의를 주관해 달라고 요청해 현재 모든 이해 당사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도 이미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 그는 "다음 달 초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선 추가적 조율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회의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1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반 총장은 17일 흑해 연안의 러시아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과 만나 시리아 사태와 한반도 긴장 상황, 아프가니스탄 정세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정부, 10월까지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추진>(5/14, 연합뉴스)
 - 정부가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을 10월 말까지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측에서 협상 대사가 임명돼 있고 미국측에도 기존 방위비 분담 대사를 해오신 분이 있으니 올 10월까지 목표로 6~7차례 협상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당국자는 "이달 말이나 6월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내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면 되는데 의회 비준기간이 필요하니 현실적인 테드라인은 10월"이라고 말했다.
 -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 왔음. 한미 양국은 내년 이후에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을 올해 체결해야 함.
 -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는 우리측 분담률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현재 40%대인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중임.
 -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와 국회 비준 등의 이유로 50%까지 급격히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
 -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분담금을 정하겠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밝혀 왔



음. 우리나라는 1차 SMA에 따라 1991년 처음 1천73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했으며 현재는 연평균 8천억원 가량을 내고 있음.

- 한편, 1991년에서 2008년까지를 기준으로 국방예산은 3.6배 증가한 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6.9배 증가했음.

● <美 북한인권특사 방한 돌연취소...배경 주목>(5/19, 연합뉴스)

- 북한 인권 및 식량문제 등에 대한 협의차 19일 방한할 예정이었던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국 방문을 돌연 취소했음.
- 북수의 외교 소식통은 "킹 특사가 한국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취소 사유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킹 특사는 애초 19~23일 한국에 머물면서 임성남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 등 정부 인사들과 면담하고 북한 인권, 북한 정책을 주제로 각각 진행되는 콘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었음.
- 미국 국무부도 17일(현지시간) 이런 킹 특사의 방한 일정을 일본 방문 일정과 함께 공식 발표했다.
- 그러나 킹 특사는 국무부 발표 이후 갑자기 한국과 일본 순방 일정을 취소했음. 이런 일정 취소는 매우 이례적인 것임. 일정 취소는 그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말도 들림.
-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킹 특사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현안이 갑자기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특히,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가 북한에 대한 적대범죄행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한 것과 맞물려 킹 특사가 북한측과 모종의 접촉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 앞서 킹 특사는 2011년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가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에 이어 방북해 전용수씨가 석방되는데 역할을 했음.
- 이에 대해 미국은 "완전히 행정적인 이유에 따른 것으로 정책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음. 이 소식통은 "미국 측이 행정 절차상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나. 한·중 관계

● <靑, 방중 채비 본격화...中전문가 초청강연>(5/16, 연합뉴스)

-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두번째 해외 출장이 될 중국 방문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음.
-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은 지난 14일 중국 및 북한문제 전문가인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와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고 청와대 측이 16일 전했다.
- 이 교수와 김 교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단행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북중관계가 예전과 달리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북한을 놓고 한중 간 공조 여지가 훨씬 커졌다는 내용의 강연이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 청와대가 두 사람을 초청해 강연을 들은 것은 중장기 안보전략을 짜는 차원도 있지만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박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준비과정의 성격이 큼.
- 북중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의제를 짜는 한편 박 대통령이 중국에 전할 메시지를 다듬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임.
- 청와대는 다른 대북, 대중 전문가들과도 접촉하며 방중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후문임. 청와대가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학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 배경으로 외교안보라인에 '중국통'이 부족한 점이 꼽힘.
-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중국 전문가는 비서관급 이상에는 없음. 중국과장과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낸 조원명 외교부 국장이 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을 뿐임.
- 박 대통령의 방중 시기를 놓고 정부는 중국 측과 다음달 중순께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박 대통령은 15일 언론사 정치부장단과 만찬 간담회에서 "중국에서 가급적 방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얘기해왔기 때문에 저도 가능한 한 빨리 중국을 방문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음.

다. 한·일 관계

- <하시모토 유신회 대표 "아베 침략정의 발언 지지">(5/13, 연합뉴스)
 - 독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망발을 일삼아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번에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주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시모토 대표는 이날 오사카 시청에서 취재진에게 일본의 과거 전쟁에 대한 역사인식과 관련, "침략에 학술적인 정의는 없다는 것은 총리가 이야기한 그대로다"라고 강변했음.
 - 그는 또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강자 집단에 위안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망발을 다시 늘어놓았음.
 - 그는 이어 "왜 일본의 중군 위안부제도만 문제가 되느냐. 당시는 세계 각국이 (위안부제도를) 갖고 있었다"면서 "폭행, 협박을 해서 납치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했음.
 - 하시모토 시장은 '총리감'으로 거론될 정도로 일본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정치스타로,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와 함께 신생 보수야당 일본유신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음.
 - 유신회는 최근 개헌발의 요건을 정한 헌법 96조 개정을 적극 지지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주장하는 등 아베 정권과 정치적 보조를 같이 하고 있음.

- 하시모토 시장은 작년 8월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며 "있다면 한국이 내놔야 좋겠다"고 말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을 샀음.

● <정치권, 731부대 연상 사진 촬영한 日총리 비난>(5/14, 연합뉴스)

- 정치권은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자위대 기지를 방문, 생체실험을 자행했던 일본 관동군 세군부대인 '731부대'를 연상케하는 '731'숫자가 적힌 전투기에 탑승, 사진을 촬영한 데 대해 또 다른 형태의 역사부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비난했음.
-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피해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나치 문양을 한 전투기에 타고 기념촬영하는 장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도 아베 총리는 이와 유사한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정 의원은 "아베 총리와 그 주변 인사들의 침략역사 부정은 한국, 중국 등 피해국에 대한 모욕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중국, 미국 등 관련국과 협조해 일본의 폭주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음.
-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자 역사를 왜곡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김 의원은 "역사 왜곡에서 비롯된 동북아 긴장 상태는 평화를 해치고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을 조장할 뿐"이라며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 선량한 일본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일본 미야기현 히가시마쓰시마의 항공 자위대 기지를 방문, 곡예비행단인 '블루 임펄스'를 시찰하면서 T-4 훈련기 조종석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린 모습의 사진을 촬영했음. 아베 총리가 앉은 조종석 바로 아래에는 흰 바탕 위에 일장기를 상징하는 붉은 원과 '731'이라는 숫자가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음.

● <日, '이지마 방북' 우리 정부에 사전통보 안해>(5/14, 연합뉴스)

-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중국과의 3각 공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내각 인사가 14일 전격 방북해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음.
- 특히,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와 공조를 해 온 일본 정부는 이번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자문역)



- 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우리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외무성은 방북 인사가 총리 자문역이라는 점을 들면서 자신들도 방북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우리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정부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도 몰랐고 우리도 방북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의 도발로 한일관계에 냉기류가 조성되어 일본이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음.
 - 미국도 사전에 이지마 방북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방한중인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지마 방북 관련 질문에 "그것을 듣지 못했다"면서 "일본 카운터파트와 이야기할 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 정부는 일단 이번 방북이 북일간 현안인 일본인 납치문제 논의를 위한 것으로 일본 내에서도 비밀리에 추진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은 납치문제와 관련, 지난해 북한과 국장급 차원의 실무회담을 진행하다가 지난해 말 중단한 상태임.
 - 납치문제는 일본 국내 정치에서 큰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일본 정치인들은 중요한 현안인 이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
 - 우리 정부 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일본이 독자 행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각도 일부 있음.
 - 아베 정권의 납치문제 해결 욕심이 대규모 대북 지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한미 양국의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임.
 - 특히, 이번 방북이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 안팎에는 이번 방북 결과가 북핵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는 시각이 많음.
- <주일대사 "위안부 문제, 일본을 위해서라도 해결하길">(5/17, 연합뉴스)
- 신각수 일본 주재 한국대사는 16일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에 대한 배려를 넘어 일본이 떠는 '가치관 외교'와 관련된 인권 문제"라며 "일본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결, 한일관계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음.
 - 후임자가 내정됨에 따라 이임을 앞둔 신 대사는 이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 센다이(仙台)의 도호쿠(東北)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최근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의 망언으로 재부각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신 대사는 또 역사인식 갈등과 관련해서 "일본의 젊은이는 (식민지 때) 한국인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한국의 젊은이는 전후 일본의 행보가 아시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대해 좀 더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신 대사는 이어 "중국이 평화적으로 지역의 번영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라. 미·중 관계

● <주미 中대사 "양국, 제로섬 역사 되풀이하지 않을 것">(5/18, 연합뉴스)

- 추이텐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중국과 미국이 제로섬 관계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추이 대사는 최근 미국 월간지인 '디플로머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 간 관계 발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신문사가 18일 전했다. 제로섬 관계는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관계를 말함.
-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가 빠르게 발전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얻으면 다른 나라와 제로섬 관계를 보이곤 했다"며 "이런 관계는 항상 충돌이나 심지어 전쟁으로 치달았다"고 밝혔다.
- 이어 "현재 중미 양국 모두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로 결심했다"며 "이를 위해 서로가 협력해 대립적이지 않은 신형 대국관계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추이 대사는 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해도 언론 매체들이 보도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며 "북한은 중국의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이면서 독립적인 주권 국가"라고 말했다.
- 그는 '언론 매체가 보도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중국이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로 지목되며 북핵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방 언론의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반대하고 북한도 이런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설명했다.
- 그는 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왔다"며 "이는 북핵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 추이 대사는 이와 함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시전략에 대해 많은 중국인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다만, "미국이 아태정책에 대해 적극 설명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며 "중국도 이를 경청하면서 실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 미·일 관계

● <아베 "미 의회보고서, 우리 생각 충분히 이해 못 해">(5/13, 연합뉴스)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신의 '침략 정'의 발언으로 촉발된 국내외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느라 부심하고 있음.



- 아베 총리는 13일 오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의회조사국이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자신을 '강경한 민족주의자'라고 평가한데 대해 "우리나라의 생각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의 입장을) 발신하겠다"고 밝혔다.
 - 그는 또 "틀린 부분의 정정을 요구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홍보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일관계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의 공식 견해를 담은 것은 아닌 만큼,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일일이 코멘트 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돌렸다.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무조사회장이 전날 "무라야마 담화 중 '침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여파를 줄이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
 -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회견에서 다카이치 정조회장의 발언에 대해 "개인의 견해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뒤 "(다카이치 정조회장에게) 정부 입장을 확실히 설명해주겠다"고 말했다.
 -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내가 이 자리에서 설명한대로다"라고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은 10일 회견에서 "침략의 정의에 대한 학문적 논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베 내각이 침략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며 "어쨌거나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스가 장관은 또 다카이치 정조회장이 아베 총리의 극동국제전범재판(도쿄재판)에 대한 생각은 역대 내각과 다른 점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 뒤 "일본은 (도쿄재판의 결과를) 정식으로 받아들였고, (아베) 총리도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5년에 발표할 '아베 담화'에 대해서는 "기존 담화를 계승하면서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 미래지향적인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 <아베 총리 "납치 문제 해결하려면 일본이 움직여야">(5/18, 연합뉴스)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 미국에 사전 연락도 없이 정부 인사를 방북시킨 것과 관련해 일본이 주도적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 18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7일 월간지 'Voice(보이스)'와 인터뷰에서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자문역)의 방북과 관련해 "납치 문제는 일본이 중심이다. 일본인 납치문제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며 "다른 나라는 협력한다고 해도 온도 차가 있다"고 밝혔다.
 - 정치 평론가 시노하라 후미야(篠原文也)씨가 인터뷰 후 취재진에게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전했다.
 - 일본인 납치 문제에 유독 관심을 보여온 아베 총리가 이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겠다는 생각에 집착한 끝에 한국,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경



- 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일본 내에서는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자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도권과 오키나와 등지에 확대 배치하는 등 호들갑을 떠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도 않은 가운데 납치 문제 해결에 접촉해 북한과 비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체면을 구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요미우리신문은 총리 주변 관계자를 인용해 "총리는 방북 전 이지마씨에게 '북한이 하는 얘기를 듣기만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음. 이는 일본 정부 인사가 방북하긴 했지만 '핵, 미사일, 납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려는 의도였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이 신문은 미국이 이지마 참여의 방북과 관련해 외교통로를 통해 일본 측에 불쾌감을 전달했다며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지마는 (북한에)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한편, 글렌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7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만나 한국과 미국이 이지마씨의 방북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이라며 "한·미·일이 일치 협력하는 자세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는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바. 미·러 관계

- <"오바마, 푸틴에 MD 정보 교환 협정 체결 제안">(5/15,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각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15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러시아를 방문한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전했다.
 - 이 제안은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추진 중인 유럽 MD 구축 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오바마 대통령은 친서에서 "양국의 MD 프로그램들이 상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기 위해 두 나라가 MD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 법률적 강제성을 가진 투명성 관련 협정을 체결하자"는 구상을 제시했음.
 - 오바마는 특별한 역사적 사명을 가진 미국과 러시아가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툼 게 아니라 전(全) 지구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 외교 소식통은 신문에 "MD 분야의 투명성 확보는 그것 자체로 러시아에 유익할 뿐 아니라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유용한 장치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 예상했음. 크렘린궁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건설적 제안을 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 미-러 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나토와 함께 추진 중인 유럽 MD 계획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음.
 - 미국이 이란 등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러시아가 자국 핵전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임.
 - 러시아는 그동안 나토의 유럽 MD가 자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요구해 왔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이면서 양측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음.
 - 러시아가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할 경우 MD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봉합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러 외무부, 간첩 혐의 미국 대사관 직원에 추방령>(5/15,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가 14일(현지시간) 간첩 혐의로 체포된 미국 대사관 직원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
 - 이에 앞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위장해 활동하면서 러시아 정보기관 관계자를 포섭하려 시도한 CIA 요원 라이언 크리스토퍼 포글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음.
 - 외무부는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FSB의 포글 체포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의 활동을 냉전시절에나 있을 법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신속한 출국을 요구했음.
 - 외무부는 "양국 대통령이 국제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정보기관 간 공조를 비롯한 두 나라 사이의 협력 확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루어진, 냉전시절에나 있을 법한 도발적 행위는 결코 상호 신뢰를 강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외무부는 이어 포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비우호인물)'로 지정했다면서 그의 조속한 귀국을 요구한다고 밝혔음. 외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 마이클 맥폴 미국 대사를 초치해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음.
 - FSB에 따르면 포글은 러시아 남부 북(北)캅카스 지역에서 반(反)테러 활동 전문가로 일하는 러시아 정보기관 장교에게 미국 정보원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 포글은 그 대가로 연 100만 달러(약 11억 원)를 약속하고 미리 선금조로 10만 유로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음.
 - 체포 당시 크리스토퍼의 몸에선 특수 기술 장비와 포섭 대상에게 건넬 문서로 된 지령, 거액의 현금, 가발과 위장용 화장품 등이 발견됐다고 FSB는 설명했다음.
 - 포글은 체포 후 FSB에서 조사를 받은 뒤 미국 대사관 직원에게 인도됐음. 포글을 데리러 온 미 대사관 직원들은 FSB의 설명과 물적 증거물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음.
 - 스파이 사건은 이달 초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러시아 방문으로 한동



안 심각한 갈등을 겪어온 미-러 관계가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터져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음.

사. 일·러 관계

- <“中핵잠수함, 오키나와 근해 잠항…미 항모 추적?”>(5/14,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이들 중국 잠수함이 13일 한국에서 시작된 한미합동해상훈련 참가차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추적하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중대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잠수함이 "잠수한 채로 영해에 들어오면 당연히 (자위대의) 해상 경비 행동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아베 총리는 잠수함의 국적에 대해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국적을 포함, 필요한 분석·평가는 이미 하고 있다"고 말했음.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도 기자단에 "(이들 잠수함이) 일본 영해에 들어오면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음.
 - 해상경비행동은 일본 해상보안청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자위대가 출동, 해상에서의 인명·재산보호·치안유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총리의 승인을 거쳐 방위상이 발령
 - 일본은 중국 잠수함의 이번 항행이 국제법상 문제는 없으나 10일 사이 두 번이나 일본 접속수역을 잠항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위협(정부 고위 관계자)"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잠항 사실을 공표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음.
 - 유엔 해양법조약에 따르면 잠수함이 다른 나라 영해 안을 통과할 경우 수면 위로 선체를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접속수역을 잠수한 채로 항행하는 것은 허용됨.

- <중국 "일본 정치인 위안부 발언에 강렬한 분개심">(5/14,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종군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오사카 시장의 망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음.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우리는 일본 정치인이 인류의 양심과 역사적 정의에 도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놀라움과 강렬한 분개심을 느낀다"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요구받고 "위안부를 강제로 데려간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엄중한 죄행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음.
 - 홍 대변인은 "일본이 과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일본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아시아 이웃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홍 대변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31부대'를 연상



케 히는 731 숫자가 새겨진 항공자위대 항공기 조종석에 앉아 사진을 찍는 것과 관련, "일본 731부대의 죄행은 여전히 아시아 이웃 나라에 현실적인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음.

● <중국 장성 "오키나와, 중국 일부분" 주장>(5/15, 연합뉴스)

-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이 일본 오키나와를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음. 이 발언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지난 8일 오키나와 귀속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학자의 기고문을 게재해 일본의 반발을 산 가운데 나온 것임.
- 중국전략문화촉진회 비서장인 뤼위안(羅援) 소장은 14일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류큐(오키나와의 옛 이름)는 대만 열도의 일부분이므로 중국의 일부분이지 절대 일본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음.
- 뤼 소장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 미국이 오키나와를 관할하다가 1971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함께 일본에 넘긴 것이 오키나와와 센카쿠 문제의 근원이 됐다는 논리를 폈음.
- 센카쿠 영유권 분쟁이 장기화한 가운데 중국은 일본 압박 차원에서 인민일보를 동원, 오키나와 주권 문제를 이슈화하고 나섰다.
- 중국 정부는 명확한 태도 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논의를 고의로 내버려두거나 혹은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임.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인민일보의 주장이 중국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느냐는 물음에 "류큐와 오키나와의 역사는 학계가 장기간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라고 답했음.
- 아울러 중국은 최근 핵동력 잠수함을 오키나와 근해에서 잠항하게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중국의 오키나와 주권 거론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인민일보의 사실)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음.

아. 기 타

● <중국 남해함대, 난사군도서 '무력시위'>(5/14, 연합뉴스)

- 중국이 영유권 갈등으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있음. 중국 남해함대는 12일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레틀리) 일원에서 대함 미사일을 갖춘 군함 등을 동원해 순찰 활동을 폈다고 대만 연합보가 14일 전했다.
- 남해함대는 이날 가상의 적을 겨냥한 미사일 모의 발사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상 활동은 지난 9일 조업 중이던 대만 어민이 필리핀 해양경비대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같은 날 필리핀이 중국을



- 겨냥해 군함을 급파해 해상 감시활동을 한 뒤 나온 것임.
- 남해함대 소속 장먼(江門)함 후춘더(胡純德) 함장은 "실전과 같은 자세로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군은 남중국해에서 전투태세를 갖춘 순시 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대만 언론은 중국이 최근 대만어민 피격사건을 계기로 남중국해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한편, 중국 당국은 실제 '야만적이다' '문명이 걸여돼 있다' 등 외교적으로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남중국해 문제로 자국과 갈등을 빚는 필리핀의 충격 행위를 연일 맹비난하고 있음.
- <대만 "필리핀 사과 불충분"…제재착수 선언>(5/15, 연합뉴스)
- 필리핀 정부가 대만 어민 피격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했던 양국 갈등사태가 대만 측의 사과 수위와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로 원점을 맴돌고 있음.
 -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15일 오전 고위급 국가안전회의를 개최해 필리핀 측이 타이베이 주재 필리핀대표부 대표를 통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성의가 부족하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총통부 대변인이 전했다.
 - 마 총통은 당초 전날 자정까지로 못박은 사과 시한을 넘길 경우의 '제재' 조치로 제시했던 필리핀 노동자 수입 동결, 필리핀 주재 대만대표부 대표 철수, 타이베이 주재 필리핀대표부 대표 귀국 요구 등을 즉각 실시하라고도 지시했다.
 - 앞서 린용러(林永樂)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이날 새벽 안토니오 바실리오 타이베이 주재 필리핀대표부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측의 사과 사실을 공개
 - 필리핀 측은 대만이 요구한 4가지 사항 가운데 사과와 함께 중첩수역에 대한 어업협정 논의 착수, 충격 책임자 처벌 등도 약속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대만 사망 대만 어민 가족에 대한 배상 부분에 대해선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 대만 정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를 2차 시한으로 정하고 이 때까지 보다 공식적이고 성의있는 사과와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2차 제재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한편,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특사를 파견해 어민 유족에게 사과할 것으로 전해져 이를 계기로 양국 갈등사태가 봉합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장기화될 지 주목됨.
 - 양국은 지난 9일 바시해협 인근 중첩 수역에서 조업하던 대만 어민이 필리핀 해양경비대의 충격을 받고 사망하자 공식 사과,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음.



● <한·미·일, 제주 남방 해상서 합동훈련>(5/15,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이 15일 제주 동남쪽(일본 규슈 서쪽) 공해상에서 비공개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도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한다"면서 "이 훈련은 지난 2011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에는 우리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과 한국형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4천200t급), 미국 측은 니미츠호 항공모함강습단에 소속된 이지스 구축함 2척이 참가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아시카라함(7천700t급), 호위함 아키즈키함(4천200t급)이 참여했다.
- 민간 선박이 공해상에서 조난당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은 진행됐으며 3국 함정들은 각각 부여된 임무에 따라 기동하면서 수색·구조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 3국은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 계획은 작년에 수립됐으며 올해 들어 구체적으로 계획이 짜여졌다"면서 "미국 항공모함은 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변 해상에서 대기했다"고 전했다.
- 일각에서는 최근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군국주의 행보를 보이는 일본이 미국과 진행하는 군사훈련에 우리 군이 적극 참여한 것은 국민정서와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그러나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SAREX 훈련이 정치적인 문제로 중단되곤 한다면 앞으로 군사훈련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 국방부는 이 훈련 일정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일본 언론에 먼저 보도되자 뒤늦게 훈련 상황과 참가 전력 규모 등을 공개했다.
-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애초 미국과 일본만 참가해 공개 훈련을 하려고 했다가 한국이 참가하면서 비공개 훈련으로 바뀌었다"며 "미국이 예정에 없던 한국을 참가시키는 등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력 강화 방침을 선명히 밝혔다"고 훈련 배경을 설명했다.

● <아베-하시모토 '위안부 충돌'...개헌 밀월에 균열>(5/15, 연합뉴스)

-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의 '위안부 발언' 파문이 개헌을 매개로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하시모토 대표의 '밀월'을 흔들고 있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대표의 발언과 관련, "나와 아베 내각, 자민당의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에 마음아파한다는 점은 역대 정권과 입장이 같다고 밝혔다.
- 아베 총리의 이런 반응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받은 하시모토 대표는 "일한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하는 쪽



- 이 옛 위안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받아줬음. 아베 총리를 포함한 자민당 내각이 법 논리를 거론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임
- 변호사 출신인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은 어렵지만 확실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음.
 - 또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밝힌 2007년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과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村山) 내각의 무라야마 담화가 "역사인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며 싸잡아 비판했음.
 - 개헌을 최대의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는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후 개헌 지지세력을 규합할 계획을 밝히면서 연대 대상 1순위로 하시모토가 공동대표로 있는 일본유신회를 꼽은 바 있음. 유신회는 지난 3월30일 당 대회에서 현행 헌법을 "점령헌법," "원흉" 등으로 묘사하며 개헌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음.
 - 한편, 하시모토 대표는 이날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위안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에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라며 해명했음.
 -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제까지 발언이 "옛 위안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이어 "구미 각국이 자유연애라는 이름 아래 현지의 여성들을 이용해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일본만 부당하게 모욕하고 있다"고 토로했음.
 - 하시모토는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그 정도로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강자 집단에 위안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밝히고, "왜 일본의 중군 위안부제도만 문제가 되느냐. 당시는 세계 각국이 (위안부제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